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9
----------	------

발의연월일 : 2024. 7. 19.

발 의 자 : 한정애 · 김준형 · 서영교
이수진 · 이학영 · 송옥주
민병덕 · 문진석 · 소병훈
민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경유 및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경유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 · 정년연장 · 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항들은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7조제1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법」 제5조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2. 제30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는 경우

제7조제1항 본문 중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의 제청으로”를 “제청으로”로 한다.

제30조제4항 후단 중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을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3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을 “국무총리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강등·정직 및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6조의2(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법」 제5조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u></p> <p><u>1.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u></p> <p><u>2. 제30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u></p>

제7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년) ① ~ ③ (생략)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

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는 경우

제7조(임용권자) ① -----

제청으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경정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
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경정
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
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33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국무총리를

찰청장이 한다.	
----------	--